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성명

수험 번호 -

제 () 선택

1.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A와 B로 구분된다. A는 B와 달리 정치가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한편, A와 B는 모두 (가) 을/를 정치라고 본다는 공통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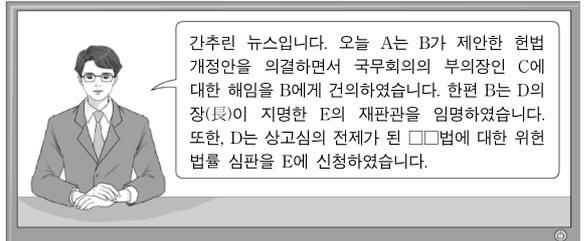
- ① A는 국가의 존재를 정치 현상의 전제로 본다.
- ② A는 B와 달리 국회의 입법 행위를 정치로 보지 않는다.
- ③ B는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갈등 해결 과정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 ④ B는 A와 달리 노조와 사측의 임금 협상 과정을 정치로 본다.
- ⑤ (가)에는 '국왕의 통치 행위'가 들어갈 수 없다.

2. 법치주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법치주의는 통치 행위가 법률에 근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통치의 내용과는 별개로 통치 행위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면 합법적인 통치인 것입니다.
 을 : 아닙니다. 법치주의는 통치 행위에 합법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통치 행위가 인간의 존엄성이나 실질적 평등에 부합하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 ① 갑의 관점은 법률의 헌법에 대한 우위를 강조한다.
- ② 갑의 관점은 개인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다고 본다.
- ③ 갑의 관점과 을의 관점은 모두 인(人)의 지배를 부정한다.
- ④ 을의 관점은 합법적인 통치 행위는 정당성을 갖는다고 본다.
- ⑤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3. 우리나라 헌법 기관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A는 B와 달리 조약에 대한 비준권을 갖는다.
- ② A, B, C는 모두 E의 재판관을 구성하는 권한을 갖는다.
- ③ C와 달리 D의 장(長)은 A의 동의를 얻어 B가 임명한다.
- ④ B는 재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통해 A를 견제할 수 있다.
- ⑤ E는 위헌 법률 심판권을 통해 A를 견제할 수 있다.

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및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갑은 강도죄 혐의로 구속되었다. 갑은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같은 날 검사가 갑을 기소하면서 갑에 대한 구속 적부 심사는 열리지 않게 되었다. 이에 갑은 구속 적부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주체를 피의자로 한정한 형사소송법 제 214조 2항의 ㉠ 신체적 자유와 구속 적부 심사를 받을 절차적 권리를 침해 한다고 주장하며 관할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수용하였다.
- 을은 비례 대표 국회 의원 선거에서 명부의 매 출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는 공직 선거법 제 47조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을은 ㉡ 자신이 남자라는 비합리적인 이유로 본인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차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 재판소는 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 ① 갑이 ㉠에서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한 기본권에는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의 기본권이 포함된다.
- ② 갑은 형사소송법 제 214조 2항의 위헌성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였을 것이다.
- ③ 을이 ㉡에서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한 기본권에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 ④ 헌법 재판소는 공직 선거법 제 47조가 침해하는 사익보다 보호하는 공익이 더 중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 ⑤ ㉠에서 갑과 달리 ㉡에서 을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5. 다음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되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헌법 재판소는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앞뒤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 대한민국 헌법 제 105조는 법관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다. 임기를 규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기 동안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헌법 제 105조는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여 외압으로부터 독립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 ① 평생 교육을 진흥하고 의무 교육 제도를 실시한다.
- ②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할 경우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도록 한다.
- ③ 최저 임금제를 실시하여 근로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 ④ 주요 분쟁 지역에 파견되어 평화 유지 활동을 하는 유엔 평화 유지군에 국군을 파병한다.
- ⑤ 연소 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정치와 법

2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치 과정이란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표출되고 집약되어 정책으로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을 뜻한다. 현대 사회의 정치 과정은 ㉠투입→㉡산출→㉢환류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이나 시민 단체 등이 정부에 정책을 요구하거나 정부의 정책을 판단하면, ㉢정책 결정 기구에서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그리고 이렇게 산출된 정책을 국민들이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을 요구하면서 정치 과정의 한 주기가 마무리된다.

- ① 유권자의 투표 행위는 정치 과정에서 ㉠과 ㉢의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
- ②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보다 ㉠→㉡ 과정이 활발할 것이다.
- ③ ㉠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국가 기관이 결정한 정책의 정당성이 약화될 것이다.
- ④ ㉢에는 언론, 시민 단체 등이 포함된다.
- ⑤ 전자 민주주의의 발달은 ㉠과정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7. 다음은 갑국의 t~t+3 시기까지의 정치 상황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질문 \ 시기	t 시기	t+1 시기	t+2 시기	t+3 시기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과 원내 가장 많은 의석을 보유한 정당이 일치하는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원내 가장 많은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의석률은 몇 %인가?	65%	55%	60%	45%

* 단, 갑국은 t~t+3 시기 동안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으며 t~t+3 시기 동안 정부 형태는 한 번만 바뀌었다.
** 갑국에는 무소속 의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갑국의 행정부 수반은 무소속이 아니다.

<보기>

- ㄱ. t시기 갑국의 행정부 수반이 내각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t+3시기 갑국에서는 연립 내각이 수립된다.
- ㄴ. t시기 갑국의 정부 형태와 t+2시기 갑국의 정부 형태가 같다면 t+1시기와 t+3시기 갑국의 정부 형태는 다르다.
- ㄷ. t+2시기 갑국의 정부 형태가 임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융합을 강조한 정부 형태라면 t시기 갑국의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ㄹ. t+3시기 갑국의 행정부 수반과 국가원수가 동일인이라면 t기와 t+2기 갑국의 정부 형태는 같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집단이다.)

얼마 전 건설업에 종사하던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면서 노동자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 종사자들로 구성된 A는 건설 환경 개선을 요구하면서, 일정 시일 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노동 환경 개선 공익 캠페인을 추진해 오던 B는 C에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에 C는 당정 협의회를 통해 정부 관련 부서와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고, 다가오는 총선에 건설업 관련 전문가를 공천하기로 하였다.

- ① A는 공적 이익을 추구하며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한다.
- ② B는 특수 이익을 추구하며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 ③ C는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다.
- ④ A는 B, C와 달리 정치 과정에서 투입을 담당한다.
- ⑤ B는 C와 달리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9.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 주민들은 A가 지방 자치 단체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주민 소환 투표를 위한 서명 운동에 나섰다. 한편 B는 □□시 핵심 사업인 가로수 조성 사업의 예산을 대폭 감액한 채로 □□시의 1년 예산안을 확정하였다.

- ① A는 B가 제정한 자치 법규의 범위 안에서 자치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 ② A는 지방 자치 단체 예산의 결산 승인권을 갖는다.
- ③ A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④ B의 구성원은 A와 달리 주민 소환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⑤ B는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사무에 대한 처리권을 갖는다.

10. 민법의 기본 원리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민법의 기본 원칙 가운데 A 원칙은 개인의 자유로운 사회적 활동을 보장한다. 만약 어떤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결과 책임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개인은 마음 놓고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A 원칙은 손해배상에 대한 개인의 책임 범위를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로 한정하여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A 원칙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위험성 높은 사업을 하는 사람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현대에 와서는 B 원칙으로 수정·보완되었다.

<보기>

- ㄱ. A 원칙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형성할 자유를 보장한다.
- ㄴ. A 원칙에 따르면 자신의 행위로부터 발생할 결과를 부주의로 인해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ㄷ. B 원칙이 적용된 사례로는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근로 계약의 해당 부분이 무효가 된 것'을 들 수 있다.
- ㄹ. B 원칙에 따르면 개인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갑과 을은 쟁의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인 병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	
(나)	갑의 노동조합은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며, 을은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다.
↓	
(다)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의 노동조합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갑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을의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을의 쟁의 행위는 부적법하나 병이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을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했다.
↓	
(라)	갑의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갑의 쟁의 행위는 적법하였으므로 갑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했다.
↓	
(마)	갑과 을에 대한 1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한편, 이로 인해 갑의 노동조합이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은 중지되었다.

- ① (나)에서 갑의 노동조합은 병이 갑의 노동 3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을 것이다.
- ② (나)에서 을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에서 을은 쟁의 행위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다.
- ④ ㉡과 ㉢의 판결만을 근거로 할 때, 갑과 을은 모두 쟁의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것이다.
- ⑤ 갑의 노동조합은 지방 노동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였을 것이다.

12.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대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반의사 불벌죄에 피해자의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규정한 조항이 없음에도 이와 유사한 것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 26조를 적용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고인 갑에 대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내용 중 A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보 기>

ㄱ. A 원칙은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각각의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ㄴ. 행위자에게 유리할 경우에는 A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ㄷ.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갑의 사건에 형사소송법 제 26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ㄹ. 상고심 도중 반의사 불벌죄에 '피해자가 의사 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더라도 이는 갑에게 적용될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3. 국제법의 법원(法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법의 법원 A는 명시적인 절차를 거치고, 주로 성문법의 형식을 갖고 있으므로 국제 사회에서 오랜 기간 반복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게된 B와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 1961년의 비엔나 협약을 통해 B의 영역에 속하였던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A의 영역으로 편입시킨 사례를 시작으로 A와 B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최근에는 A의 영역에 속한 것을 B의 영역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도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A와 B의 경계는 더욱 모호해질 전망이다.

- ① A의 체결 주체에는 국제기구도 포함될 수 있다.
- ② A는 다수의 국가에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
- ③ B는 A와 달리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 ④ B의 예시로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들 수 있다.
- ⑤ ㉠ 이전에는 외교관의 면책 특권이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인 구속력을 발생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14.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14세)은 길을 가던 중 행실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을을 폭행 하였다. 이에 을은 갑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잠겨있던 병의 상점의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 A는 B 소유의 건물에 임차하여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A에게 고용된 C(21세)가 간판 청소를 하던 중 간판이 떨어져 행인 D가 크게 다쳤다. 이에 D는 간판의 보존에 하자가 있었는지, C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

<보 기>

ㄱ. 갑의 법정 대리인의 을에 대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면 갑은 을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ㄴ. 을의 행위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므로 을은 병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ㄷ. D의 피해에 대해 B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C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면 D는 A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다.

ㄹ. D의 피해에 대해 A와 B가 모두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면 D는 C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21세), 을(13세), 병(15세)은 모두 정(14세)에 대한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갑은 병과 달리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갑은 △△지방 법원에 항소하였고,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그 후 ㉠ 갑의 2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한편, 을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았고, 을에 대한 결정은 확정되었다.

<보 기>

ㄱ. ㉠ 직후 갑은 형사 보상 제도를 활용할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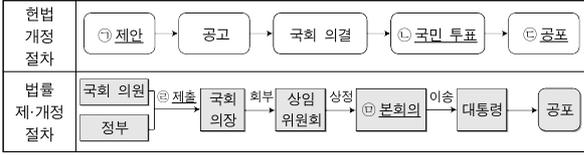
ㄴ. ㉠ 직후에도 갑은 여전히 무죄 추정 원칙의 적용을 받을 것이다.

ㄷ. 을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직접 소년부로 송치되었을 것이다.

ㄹ. 병은 을과 달리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6.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은 헌법 개정안에 대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하다.
- ② ㉡에서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③ 대통령은 국민 투표를 통과한 헌법 개정안을 15일 이내로 ㉢ 하여야 한다.
- ④ 국회 상임 위원회도 ㉣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⑤ ㉣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17. (가) 사례를 (나)에 적용했을 경우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A를 임양해 키우고 있던 갑(여)은 을(남)과 법률혼을 하였고, 갑과 을 사이에서 B가 태어났다. 그러나 갑과 을은 성격 차이로 이혼하였고, 을은 병과 동거하며 병과의 사이에서 C를 얻었다. 한편, 을은 여행을 가다가 사고로 죽게 되었는데, 을의 집에서 '전재산을 ○○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이 발견되었다.

(나)

질문	상황	
을이 A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는가?	㉠ 예	㉡ 아니오
C가 을에 대한 법정 상속인인가?	㉢ 예	㉣ 아니오
을의 유언장이 유효한가?	㉤ 예	㉥ 아니오

* 단, A, B, C는 모두 미성년자이며, 을과 병은 혼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 ① 갑과 을의 이혼은 법원의 판결 직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으로 인해 A는 갑이 사망하더라도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 ③ ㉠, ㉢, ㉤의 상황에서 A, B는 모두 자동으로 ○○재단으로부터 상속액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 ④ ㉡, ㉢, ㉤의 상황에서 C의 상속액은 최대가 된다.
- ⑤ ㉡, ㉢, ㉤의 상황에서 B는 을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는다.

18.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17세)은 얼마 전 발명품 경진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을(23세)로부터 고가의 재료 A를 7일 후 배달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당시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였으며, 을은 갑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재료 A가 없던 을은 병(30세)으로부터 A를 4일 후 배달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병은 재료를 착각하여 A가 아닌 B를 을에게 배달하였다. 이에 을은 A를 구할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빠르게 A를 구하는 데에는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아 갑에게 B를 배달하였다. 결국 갑은 발명품 경진 대회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 보 기 >

ㄱ. 갑의 법정 대리인은 갑과 달리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을은 갑과 갑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ㄷ. 갑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갑과 을은 모두 병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가운데 A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국제 사회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B가 있음에도 B의 판결이 실질적으로 당사국을 구속할 수 없기에 A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한편 C는 국제 연합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이지만 C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다.

- ① A의 실질적 안전에 관한 결정 과정은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자유주의적 관점과 부합한다.
- ② B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분쟁 해결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갖는다.
- ③ C의 의결 과정은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현실주의적 관점과 부합한다.
- ④ A는 C와 달리 B의 재판권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⑤ B와 C는 모두 국제 연합 관련 기관의 법적 질의에 권고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의 의회는 지역구 의원 140인과 비례 대표 의원 60인으로 구성된다. 지역구 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가 아니며,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당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2인의 후보자까지 공천할 수 있다. 또한, 각 선거구별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 수는 같다. 비례 대표 의석은 각 정당이 확보한 지역구 의석수의 비율에 비례 대표 의원 정수(定數)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数)만큼 각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단, 소수점 이하의 수가 같을 경우에는 지역구 의석수가 적은 순서대로 잔여 의석을 1석씩 배분한다. 다음은 갑국의 현행 지역구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 현행 지역구 의회 의원 선거 결과 >

구분	A당	B당	C당	D당
의석수	61석	43석	21석	15석

한편, 갑국의 비례 대표 의원 선출 방식이 ㉠ 선거권자의 투표행위로써 비례 대표 의원의 선출을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없어 민주 선거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갑국 의회는 유권자가 후보자에 한 표,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하도록 한 후 지역구 의석수가 아닌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비례 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선거 제도를 도입하였다. 단,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은 지역구 의석수의 비율 대신 정당 득표율을 사용한 것 이외에는 기존의 방식을 유지한다.

< 바뀐 비례 대표 의원 선출 방식을 적용한 선거 결과 >

구분	A당	B당	C당	D당
의석수	83석	63석	32석	22석

* 정당은 A~D당만 존재하고 무소속 후보는 없으며 투표율은 100%이고 무효표는 없음.
 ** 바뀐 비례 대표 의석 할당 방식 적용 시 최근 의회 선거의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만을 근거로 판단함.

- ① ㉠은 갑국의 비례 대표 의회 의원 선출 방식이 민주 선거의 원칙 중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비판이다.
- ② A국에서 각 선거구별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 수는 2명이다.
- ③ 갑국의 최근 의회 의원 선거에서 A당의 의석수는 D당의 의석수의 4배를 넘는다.
- ④ 바뀐 비례 대표 의원 선출 방식을 적용했을 때, C당은 과소대표 되었다.
- ⑤ A당은 바뀐 비례 대표 의원 선출 방식을 적용하면 기존 선거 제도에 비해 의석수가 3석 줄어든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